

오늘 헌재 선고, 박 대통령 운명의 날

국회 소추위원단 “수험생 심정…결과 무조건 승복”… 대통령 대리인단 측 “승복여부 선고 전까지 말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둔 9일 국회 소추위원들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험 본 수험생 심정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 일원이고 법률 전문가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결과와 특검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도 현재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각하를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은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이 마지막이라도 탄핵과 관련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분열된 국민이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식의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가 크게 흔들릴 없이 왔기 때문에 인용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설득해서 선고의 정당성, 설득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8대0을 예상해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세계 동시 생중계 되는 1시간짜리 탄핵 심판”이라며 “탄핵 결정문



탄핵 선고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찰이 청와대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을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면 불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혹시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긴장감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왕이면 8대0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현재 결과가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나왔다고 엄청나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야 할 거 같다”고 내다봤다.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를 당일 선고 전까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

김영배, “도·출연기관 청소·경비원 직접 고용을”

전북도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 직속출연기관의 인력 외주용역을 중단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직접고용을 하는 경우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석 3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인력외주를 위해 용역기관에 지급하는 총액 28억여원을 외주 용역인원 99명으로 나누면 생활임금은 물론 4대 보험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도 남은 1인당 2,800여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고용으로 청소원과 경비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위탁·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지급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임금 7,700원에 훨씬 못미치는 6,470원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부서에 보고도 없이 직접고용을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려던 기관이 있었는가 하면 전북도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들이 계약한 용역업체 대부분 생활임금을 준수하지 않아 공공기관들이 생활임금 위반과 고용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했다. /인재용 기자

부안 ‘불가사리 발효액비 사업’ 국비사업 선정

국민의당 김중회 의원(김제, 부안)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공모사업에서 부안군이 공모에 응한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 사업’이 국비사업에 선정된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온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한다는 김 의원은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데에는 관계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이 사업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철저히 준비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닌 실험정신을 심본 잘 살려서 군민행복과 잘사는 부안군민을 위한 군정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정된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 37억 원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불가사리를 이용하여 연간 액비 650MT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를 연간 65억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는 물론 불가사리 구제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방지 및 불가사리를 활용자원화하여 농가경영비를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안=이복수 기자

민주당, 원주 라보결선거 후보 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4.12 재보궐 원주군 라 선거구 공천과 관련,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지난 8일 도당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경선을 통해 공천을 실시하는 내용의 공천 방법을 의결했다.

일반당원 50%, 권리당원 50% 비율과 여론조사(ARS)를 반영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김춘진 위원장은 “서류면접심사 결과 점수차가 15점 이하로 크지 않았다”면서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정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정당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4.12 재보궐 원주군 라 선거구에는 김정환(61) 현 농촌지도자 원주군 부회장, 유희성(57) 현 원주군 애환운동본부 사무국장, 이성식(53) 전 비봉 천어성지권역사업추진위원장 등 3명 후보자가 등록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외국산 승용마 도입사업’ 헛돈 쓴 꼴

말 23두 배정 이후 김제시는 특구지정 후보군에서 제외돼… 전주·장수 조례 제정 안돼

전북도가 말산업특구 지정 대응차원에서 추진한 외국산 승용마 도입사업이 결과적으로 헛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2015년과 2016년 2개 년도에 걸쳐 총 48두의 아일랜드산 코네티카종(種)과 포니종(種)을 들여온 바 있다.

이 중 2015년도 사업물량은 김제시 23두, 장수군 5두로 김제시에 집중 배정됐다.

당시 전북도 말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후보 시군은 김제시와 원주군, 진안군, 장수군이었는데, 김제시와 장수군의 말 사육두수가 신청요건에도 미치지 못해 2개 시군에 대해 승용마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승용마 도입사업 확정 이후 김제시가 특구지정 후보시군에서 빠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특구지정 대응 차원에서 집행

한 3억 7,600만원의 사업비는 헛돈을 쓴 셈이 돼버렸다.

특구지정은 전북도 말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그만큼 전략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특구지정 주관 시군의 갑작스러운 변경과 이에 따른 외국산 승용마 도입사업의 결과적인 예산낭비는 전라북도 말산업육성 정책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특구지정의 가점요소인 특구지정 5개 후보시군(전주, 원주, 익산, 진안, 장수) 중 전주시와 장수군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특구지정 대응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의회 박재완 의원은 “김제시가 후보시

군에서 빠지고 결과적으로 외국산 승용마 도입 사업비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말산업특구 지정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전북도가 치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전북도가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해 놓고도 뒤늦게야 특구지정 경쟁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잔걸음을 재촉하다가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의원은 이어 “전북도가 말산업특구 지정에 성공하고 향후 전북도민의 관련 인프라 강점을 살려 말산업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말산업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이춘석 의원, 쌀 직불금 현실화 법안 발의

쌀 직불금 산정 시 기본적인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9일 쌀 변동직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때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쌀 수확기 전국 평균가격이 12만9,711원까지 추락하면서 쌀 생산농가가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못해 농가의 실질소득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18년 목표가격 재산정을 앞두고 현재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산출할 경우, 2015~2016년 쌀값 폭락으로 이미 평균 쌀값이 크게 하락한 바 있어 현행 18만8,000원보다 낮아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인재용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교사와
학생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지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